

보건복지 소식 광장

보건복지부 2021년 10월 보도자료(http://www.mohw.go.kr/front_new/al/sal/0301ls.jsp?PAR_MENU_ID=048&MENU_0403)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.

I

“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”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, 마음건강

- 정신건강의 날(10.10.)을 맞아 2주간 정신건강 홍보주간 운영 -
- 정부·지자체·민간, 총 770여 개 프로그램 진행 -

■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2021년 정신건강의 날*(10월 10일)을 맞아 코로나 우울 극복과 온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10월 4일(월)부터 17일(일)까지를 「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」으로 운영한다.

*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념일

- 정부는 그간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활용하여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을 집중 추진해왔으나, 공식적인 ‘정신건강 홍보주간’을 운영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,
 - 정부, 지자체, 민간 부문까지 합쳐 총 770여 개(9.30. 기준)의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,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친 온 국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.

■ 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의 핵심 메시지는 “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.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, 마음건강”으로,

○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자기주도적인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,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적 투자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의미를 담았다.

■ 핵심 메시지와 함께 일반 국민들이 쉽게 자기주도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, 일상 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‘코로나 우울 극복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4단계 수칙*’도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하며,

〈 일상생활 행동 4단계 수칙 〉

[코로나 우울 극복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STEP4]				
STEP	1) 내마음 살피기	2) 힘들다고 말하기	3) 전문가 찾아가기	4) 함께 극복하기
대상자 실행과업	내 마음건강 상태 확인하기	우울·불안에 대해 주변에 털어놓기	증상이 심할 땐 전문치료 받기	함께 참여하고 공감하기
프로그램 내용	<정보 제공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자가검진(우울·불안 등)¹ 제공 ● 정신건강 정보 제공 ● 온라인 채널 운영 	<정서 지원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1577-0119 정신건강 상담 ● 힐링콘서트 ● 소통캠페인(가족과 함께² 이야기하기 등) 	<개입·치료 연계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정신의료기관 연계 ● 전문가 심리지원 ● 약물치료 ● 치료비 지원 	<사회적 연대 강화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기념행사 ● 캠페인 ● 문화행사 ● 당사자 행사

○ 정부, 지자체, 민간 부분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홍보주간 프로그램을 모두 4단계 수칙에 따라 유형화 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〈 일상생활 행동 4단계별 프로그램 수(9.30. 기준) 〉

구분	1단계 (내 마음 살피기)	2단계 (힘들다고 말하기)	3단계 (전문가 찾아가기)	4단계 (함께 극복하기)
정부	11개	2개	2개	16개
지자체	310개	86개	44개	282개
민간	4개	2개	-	17개

-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신건강 홍보주간 전용 누리집 (<http://www.ncmh.co.kr>)에 접속하여, 정부·지자체·민간 부문이 제공하는 정신건강 홍보주간 프로그램*을 찾아볼 수 있다.
 -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행동수칙 단계별로 분류되며 프로그램의 내용과 일자, 관련 접속 링크주소도 제공하여, 국민들이 개인별 수요에 맞게 홍보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- 전용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정신건강의 날 소개, 공식 기념행사, 홍보주간 주요 행사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며,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웹툰과 카드뉴스 등도 게재된다.

-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“올해 최초로 운영되는 정신건강 홍보주간은 온 국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, ‘이제는 마음건강에 투자하세요’라는 핵심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란다”라면서,
 - “코로나 이후의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, 일상생활 행동 4단계 수칙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밝혔다.

*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8801,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,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, 2021.10.5.

II

“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,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”

- 보건복지부, 올해 1월 아동학대범죄군 신설, 형량 가중 요소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‘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’를 양형위원회에 제출 -

■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10월 8일(금)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, 아동 인권증진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■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첫째로, 「아동복지법」상 성적 학대 등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학대범죄행위*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하였다.

* 「아동복지법」상 금지행위 중 아동매매·성적 학대(제71조제1항제1호, 제1의2호)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상 아동학대살해(제4조) 및 상습범·가중처벌 조항(제6조·제7조, 학대 적용)

- 수정안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·성적 학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추가되어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이 포함되었다.

○ 두 번째로, 현재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이 포함된 ‘체포·감금·유기·학대 범죄군’ 양형기준 내에 ‘아동학대’ 대유형을 신설하였다.

- 수정안은 범죄군 신설 대신 기존 범죄군(체포·감금·유기·학대) 내에 ‘아동학대’ 대유형을 신설하여,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하나의 통일된 유형에 포섭되도록 하였다.

<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중 범죄군 유형분류 수정(안) >

체포·감금·유기·학대범죄군(현행)	체포·감금·유기·학대범죄군(개선)
1. 체포·감금 2. 유기·학대 3.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·치사	1. 체포·감금 2. 유기·학대 3. 아동학대 가.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나.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·치사·살해

○ 한편,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, 형량 가중·감경요소는 2022년 1월까지 심의 후 공청회를 거쳐 2022년 3월에 수정안을 최종의결할 예정으로, 가중·감경요소 등의 수정에 관해 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은 이때 함께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.

- 또한,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군에 적용되는 합의 관련 감경·가중요소에 대한 수정안을 공개하였다.

- 우선,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만 포함되어 있던 형량 가중요소인 ‘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’*는,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 확대 적용되며, 이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다.

*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,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·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피해를 일으킨 경우

- 복지부가 제안서를 통해 형량 감경요소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던 ‘처벌불원’*에 대해서는, 양형위원회는 감경요소임을 유지하였다.

*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, 피해자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

■ 한편,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여, 전문가 등과 논의*해 ‘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’를 마련하여 지난 1월 21일(목)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.

* 관계부처(법무부·경찰청), 법률 전문가,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‘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(TF)’를 통해 작성

○ 제안서에는 별도 아동학대범죄군 신설, 일부 형량가중요소 추가 및 확대 적용, 일부 형량 감경요소 삭제, 집행유예 기준 수정 등을 담았다.

■ 권덕철 장관은 “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”라고 밝혔다.

○ 또한,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부 양형기준 심의과정에서도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8814,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, 2021.10.13.

Ⅲ

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분야 미래 전략 모색

- 「2021 정신건강비전포럼」 개최 (10.15.) -

- 국립정신건강센터(센터장 이영문)는 국회미래연구원(원장 김현곤)과 함께 10월 15일(금) 오전 10시 “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정신건강의 미래”를 주제로 「2021 정신건강비전포럼」*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.

* 국립정신건강센터 내(內)에 설치된 정신건강 미래비전 자문위원회가 주관하여, 매년 공론화가 필요한 정신건강 현안(이슈)를 주제로 포럼 운영

- 이번 2021년 정신건강비전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*으로 진행하였으며,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분야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

* 온라인 생중계(국립정신건강센터 유튜브 <http://youtu.be/pZqlznligB4>)

- 먼저 제1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은 ‘미래 사회변화와 정신건강 이슈’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.
 -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미래 변화의 불확실성은 적응과 대응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서적, 심리적 요인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, 이번 연구를 통해서도 불안, 두려움, 좌절 등 부정적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.
 - 또한, 코로나19 확산 이후, 초기에는 감염병 자체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서 점차 사회문제로 인한 정서적, 심리적 반응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,
 - 과거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회문제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명료하게 드러났다고 보고하였다.
 -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세대, 지역, 젠더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범주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, 회복을 돕기 위한 직접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- 다음으로, 제2 주제에서는 ‘정신의학적 측면에서의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’에 대해 이동우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발표하였다.

-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심층심리가 근현대사의 영향으로 변모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고, 미래 한국인의 심리 변화와 정신의학의 대처 방안을 발표하였다.
- 이동우 교수는 강한 주체성과 상호 주체성이라는 한국인 특유의 심성이 고난에 찬 근현대사를 통해 ‘가족주의’, ‘집단주의’, ‘평등주의’, ‘민족주의’ 등과 상호작용해 온 결과,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도달했음에도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모순적인 현재의 상황을 낳게 되었다고 진단하였다.

○ 한편, 미래에는 가족주의가 약화되어 중증정신질환자 지지체계 와해 및 자살문제의 지속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, 사회의 응집성이 강화되지 못할 경우 경계선적 인격구조, 나르시시즘, 각종 중독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.

- 이에 지역사회 관리 능력 강화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증정신질환 국가 책임제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.

■ 이어서 진행된 토론은 유영학 정신건강미래비전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, 토론자는 박한선(서울대학교 연구교수), 우석훈(성결대학교 교수), 강경숙(원광대학교 교수), 김영선(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), 이영문(국립정신건강센터장), 박성원(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)이 참여하여 주제발표를 맡은 발제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.

○ 토론에 참여한 이영문 센터장은 “한국사회는 짧은 기간에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사회통합 수준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박탈감은 결국 ‘정신적 외상’으로 이어진다.”라고 지적 하였으며,

-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“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고립을 막고 전(全)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.”라고 밝혔다.

■ 국회미래연구원 김현곤 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“21세기 들어 정신건강, 우울증 등이 핵심적인 미래이슈로 부각되고 있다”라고 지적 하였으며,

-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“국민과 전문가, 정책가가 한 데 모여 더 나은 미래의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 의논하고, 정치권이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”라고 강조했다.

-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이날 영상축사를 통해 “코로나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, 포럼을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, 향후 정신건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8821,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과, 2021.10.15.

IV

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·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

- 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 후 공고(10.19.) 및 시행(11.2.) 예정 -

-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, 11월2일부터 마약류·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.

* 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49조의3,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조, 제39조, 제40조 및 제44조, 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, 제59조제1항

-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,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*하였으나,
 - *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3에 의하여, 감염병 위기 '심각' 단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
 -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,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었다.
- 이와 관련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,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.

■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, 의사협회,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*, 오남용 우려 의약품**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,

* 마약류: 「마약류에 관하여 관한 법률」 제18조제2항,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·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

** 오남용 우려 의약품: 「오·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) 지정 품목(23개 품목(성분) 함유제제)

○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(10.15~18)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10월 19일 「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」을 공고하고,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
○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.

-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
* 의료법 제90조, ** 의료법 제66조, 시행령 제32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

■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“이번 처방 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”고 당부하였다.

* 공고문 및 관련 정보는 복지부 홈페이지, DUR 알리미에 게시 예정.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시간 목록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8831,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·약무정책과, 2021.10.19.

V

당신의 모든 일상, 운동이 됩니다.

- 비만예방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(포럼) 개최(10.22.), 2021년 비만예방 표어(슬로건) 공개 -

-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가 주최하고, 한국건강증진개발원(원장 조현장)과 대한비만학회(회장 강재헌)가 주관하는 “비만예방의 날(10.11, 표어 “당신의 모든 일상, 운동이 됩니다.”) 기념 온라인 정책토론회(포럼) (이하 ‘포럼’)가 10월 22일(금) 오후 2시부터 개최된다.

-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시대 비만 예방·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“코로나19 시대의 비만 예방관리 대응과 과제”를 주제로 ‘코로나19와 비만 위기(1주제)’와 ‘코로나19 상황에서의 건강형평성 제고(2주제)’의 두 가지 사항을 논의한다.
 - 먼저 제1주제 발표자 이재혁 한양대명지병원 교수는 ‘코로나19와 비만에 대한 행태 변화 조사*’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습관 변화·운동 빈도 변화 등을 제시한다.
 - * 조사 대상: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,000명 주요 문항: 코로나19 발생 전·후 생활습관, 체중, 비만 인식도 등
 - 박소현 한림대학교 교수는 2020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수준, 성별, 가족구성원 등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건강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발표한다.
 - 이어서 조운정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교수는 한국 성인의 코로나19 전후 비만과 대사 지표 변화를 다기관 건강검진 대상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.
 - 다음으로 제2주제인 ‘코로나19 상황에서의 건강형평성 제고’에서는 조희숙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강원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비만율의 지역 간 격차의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비만율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과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.
 - 또한, 박현태 동아대학교 교수와 임미현 전남 광양중진초등학교 교장은 건강취약계층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에 대한 비만예방사업 “건강한 돌봄 놀이터”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사업을 운영한 과정을 전달할 예정이다.

-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“매해 비만예방의 날을 통해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지적해왔다.”면서,
 - “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연계하여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 코로나19로 비만의 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도 일상생활 속 활동량 증진 유도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-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“코로나19 장기화로 운동 등 외부활동이 줄어든 만큼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.”면서,
 - “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·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확산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8834,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,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실천팀, 2021.10.22.